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중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년 8월 11일 | 책임조사역(G3) 박선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9,597천 km ² 	인구 14.1억명 (2021°)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 외교 
GDP 17조 6,830억 달러(2021°) 	1인당GDP 12,518 달러 (2021°) 	통화단위 元 (RMB) 	환율(U\$기준) 6.45 (2021)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14억 명의 인구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 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 채택한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21~25년)'과 '2035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중장기 정책목표인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해 내수 위주의 '쌍순환' 경제성장과 혁신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임.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를 폐지하며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봉쇄조치 등으로 기업과 시민들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음.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전국대표대회는 2022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임.
- 미·중 패권경쟁 외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다방면에서 서방 및 아세안 국가 등 여러 국가들과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주요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종과세방지협정('94), 형사사법공조조약('00),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05), 투자증권보호협정('07), 사회보험협정('13), 기후변화협력협정('15), 영사협정('15), 자유무역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136,202,533	132,565,445	162,912,974	반도체,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07,228,736	108,884,645	138,628,127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8,370건, 86,660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제성장률	6.8	6.0	2.2	8.1	3.3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9	2.4	0.9	2.1
재정수지/GDP	-4.3	-6.1	-10.7	-6.0	-7.7

자료: IMF, EIU.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2022년 경제성장 둔화 예상

-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2.2% 성장에 그쳤던 2020년을 제외하면 아시아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에 따른 주요국 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 증가, 인프라 투자 및 기저 효과 등에 힘입어 8.1%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안정세를 보이던 중국 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021년 12월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당국이 초기 진압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여 도시 간 이동 제한, 해외 입국자 4주 간 격리, 거주지 및 직장 등 대규모 PCR 검사, 도시 봉쇄 등을 실시함에 따라 2022년 경제성장은 3%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상업 중심지인 상하이로 두 달간 봉쇄되면서 2022년 4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35.7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상하이 봉쇄 해제에 따른 공장 정상화로 2022년 6월 제조업 PMI는 51.7로 회복되었으나, 중국 정부가 2022년 말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 구매자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50 초과 시 경기 확장, 50 미만 시 경기 위축 의미
- 중국 정부가 2022년 3월 개최한 양회 회의에서 제시한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5.5%이나, IMF는 7월 27일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업데이트에서 중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음. 중국 정부는 투자와 산업정책을 포함하는 33개의 조치를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의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이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와 그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여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좌우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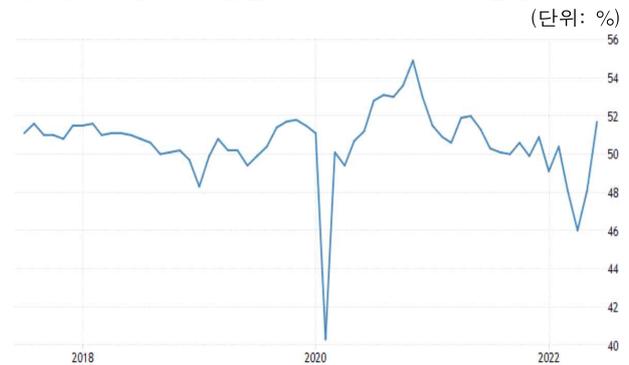
* 중국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IMF 3.3%, World Bank 4.5%, IHS Markit 5.1%, Fitch Solution 5.4%

[그림 1] 중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EIU

[그림 2] 중국의 월별 제조업 PMI 지수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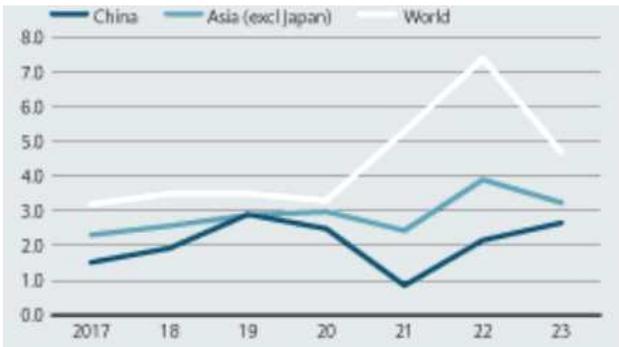
자료: Trading Economics

국내경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내로 관리 추진

-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아시아 및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1~3%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었음. 다만,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이 종식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p 하락한 0.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40.1kg이며, 이는 OECD와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인구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인 10.64kg의 약 4배에 달하는 점과 중국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33%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돼지고기 가격 변동이 중국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22년 6월 중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이며, 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돼지고기 가격 반등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됨. 중국 정부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 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따른 외부 불확실성 확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중국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EIU

[그림 4] 중국 돼지고기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위안/kg)



자료: PIG333

경기부양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기초 유지 예상

-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교육·의료 등 민생 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한편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금 환급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10.7%로 확대되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줄어들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예년 수준인 -6.0%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위축된 민간소비와 투자의 활성화(신형 인프라 건설, 기업투자 확대 등)을 위해 중국 정부가 2021년 GDP의 1/3 수준인 5조 3천억 달러를 2022년 예산에 편성하여 경기부양에 사용할 예정임에 따라 재정적자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f
경 상 수 지	24,131	102,910	248,836	317,301	519,519
경상수지/GDP	0.2	0.7	1.7	1.8	2.8
상 품 수 지	380,074	392,993	511,103	562,724	623,975
상 품 수 출	2,417,443	2,386,640	2,510,015	3,215,855	3,535,988
상 품 수 입	2,037,369	1,993,647	1,998,912	2,653,131	2,912,013
외 환 보 유 액	3,072,712	3,107,924	3,216,522	3,250,166	3,322,810
총 외 채	1,982,800	2,070,810	2,400,790	2,661,115	2,873,247
총외채잔액/GDP	14.3	14.4	16.2	15.2	15.4
D.S.R.	8.7	9.8	10.3	9.6	9.6

자료: IMF, EIU, OECD

수출 호조로 2021년 경상수지 사상 최대치 흑자 시현

- 2021년 중국의 상품 수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3조 2,158억 달러, 상품 수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조 6,5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5,62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주요 수출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5.3%), 의류 및 부자재(3.5%), 직접회로(3.2%) 등이며,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1%, 24%, 32% 증가함. 한편, 주요 수입품목은 직접회로(11%), 원유(6.5%), 철광석 및 정광(4.7%)임.

2022년 1사분기 경상수지 역대 최대 규모 흑자 기록

- 2022년 6월 24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2년 1사분기 경상수지는 889억 달러 흑자로 역대 1사분기 중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함. 상품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하고 상품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하는 등 상품무역 수출입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EIU(2022. 6월)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출 중심의 제조업 및 수입이 위축되어 2022년 무역 둔화 가능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2022년 무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능력

월평균수입액 11개월분 이상의 양호한 외환보유액 유지, 외채상환능력도 양호한 수준

- 2021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2,501억 달러이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11.1개월분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5년 이상 꾸준히 3조 달러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9.6%로 외채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다만, 2022년 7월 7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 713억 달러로 매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 재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변동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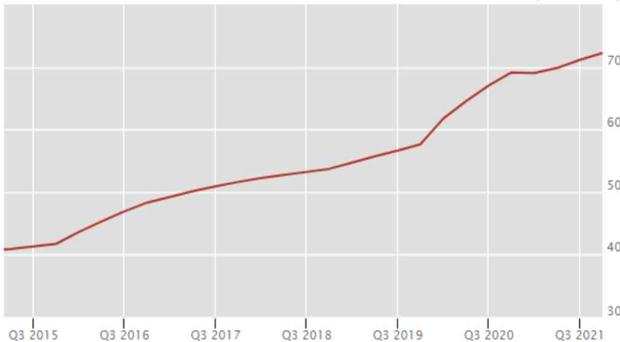
* 중국 외환보유액: 3조 2,216억 달러('22.1월) → 3조 2,138억 달러('22.2월) → 3조 1,880억 달러('22.3월)
→ 3조 1,980억 달러('22.4월) → 3조 1,278억 달러('22.5월)

구조적취약성

3대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계)의 높은 부채 비중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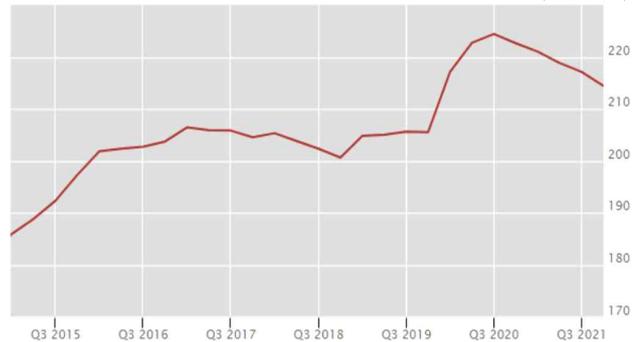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1년 말 중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72%로 2015년 말 42%에서 최근 6년 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기업(금융부문 제외) 부채 비율은 214%(2015년 3분기 말 192%)로 G20 국가들의 평균 165%보다 높은 수준임. 이는 중국 정부가 수년 간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 다수의 지역개발 및 산업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한 투자 자금 조달, 기업들의 투자 용도 차입이 확대된 결과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높아졌음. 최근 기업(금융부문 제외) 부채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그림 5]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단위: %)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그림 6] 중국의 GDP 대비 기업(금융부문 제외) 부채 비율 (단위: %)



자료: Worldome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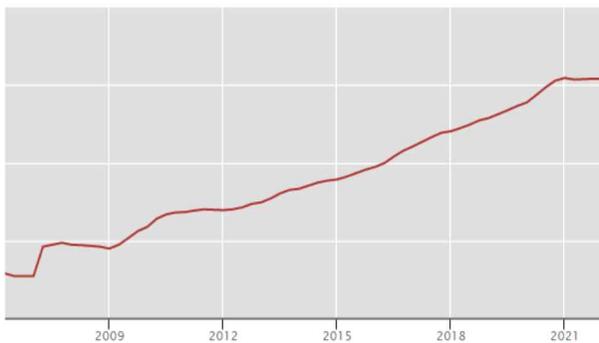
- 중국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는 지방정부 부채 역시 2021년 말 기준 30조 위안(약 5,610조 원)으로 GDP 대비 약 30%이나, 회계장부에 누락된 부채 등을 포함하면 GDP 대비 최대 1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중국 지방정부들은 인프라 투자 등 공공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 발행을 활용해 왔으며,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자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2022년 6월 중국은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할당하는 이전 지출을 9조 8,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동시에 지방정부들에게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음.
 - 또한, 2021년 말 중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62%로,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5년 간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하강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IMF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 이상이면 금융시장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해당 기준선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음.
-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1%(2006) → 27%(2010) → 36%(2014) → 52%(2018) → 62%(2021)
- 2020년 3월 기준 중국 가계부채의 55%가 주택담보부대출이며, 중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59%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 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구조적취약성

- 2021년 1월 중국 당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코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기업 앞 용자 총량규제 등 대출 규제 정책을 실시함. 대출 규제로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지방 도시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민간 1위의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도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으나 가계부채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 280개 지역에서 1,300개가 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50조원이 넘는 부채 보유
- 한편, 최근 중국 당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자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가 우려됨.
- 2022년 5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을 기존 연 4.60%에서 0.15%p 낮은 연 4.45%로 고시하였으며, 1년 만기 LPR은 연 3.7%로 동결함. 인민은행은 2019년 8월 LPR을 기준금리로 지정한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인하를 단행함.

[그림 7]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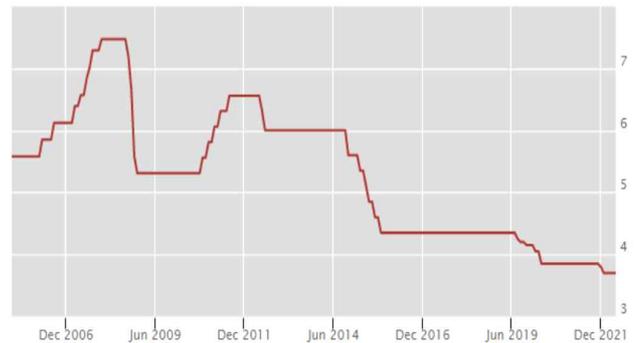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그림 8] 중국 기준금리 변동 추이(1년 만기 LPR)

(단위: %)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성장잠재력

전방위적 개방정책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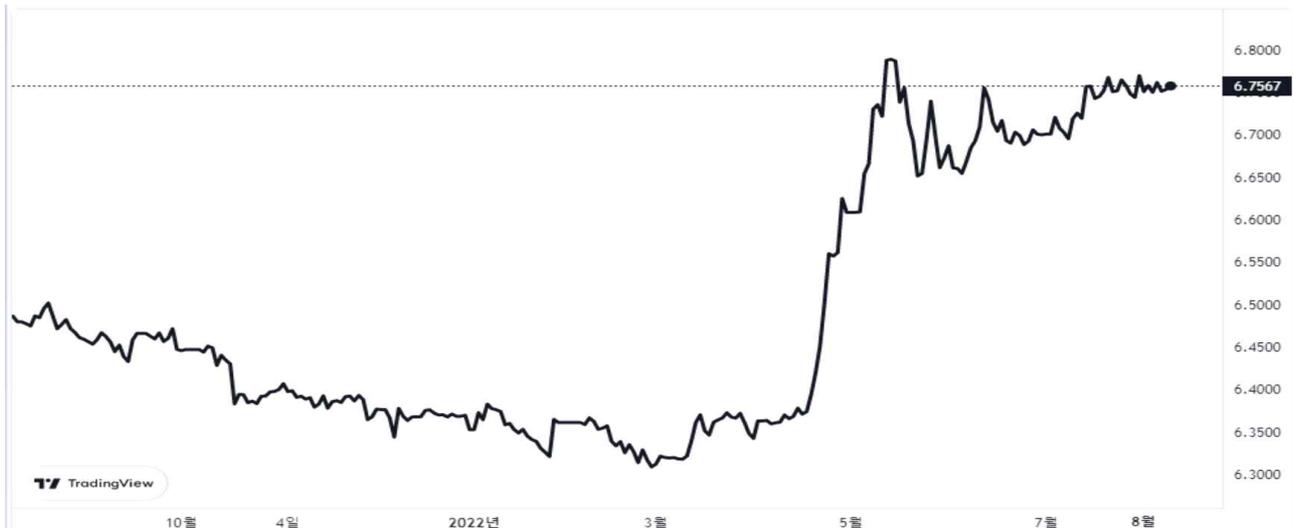
- 중국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위해 기존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체계를 구축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을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 외상투자법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을 규정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동등한 조건과 절차로 심사할 것을 명시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 가속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2021년 12월 발표한 개정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됨.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21년 기준 약 1,7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94%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 외에는 전면 개방한다는 의미로 2017년 6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매년 투자규제 항목을 축소*하여 발표하고 있음.
* ('17.6월) 63개 → ('18.6월) 48개 → ('19.6월) 40개 → ('20.6월) 33개 → ('21.12월) 31개
- 2022년 6월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5월 중국으로의 FDI 유입액은 8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하였음. 이 중 서비스업 부분의 FDI 유입액은 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함. 중국은 향후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욱 축소하고 특히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다만, 대체적으로 투자 개방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안보 이슈에는 민감하여 2021년 1월부터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가안보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음.
- 한편, 중국 중앙은행 산하 중국외환무역시스템(CFETS)에 따르면, 2022년 7월 1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상호거래 비용을 기존 대비 25% 낮췄으며, 외국인이 중국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힘.

정책성과

위안화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영향 등으로 1년 7개월 만에 약세 기조로 전환

- 미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강력 봉쇄정책에 따른 경제성장 위축 등으로 약세를 보여 5.13일 기준 달러당 6.788위안으로 1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8.10일 현재 6.7567위안으로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추세, 미국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금융시장 경계감 상승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위안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 왔으나,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자 2022년 4월 26일 금융기관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인하함. 다만,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그림 9] 미 달러당 위안화 대비 환율 추이



자료: TradingView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중장기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노력

-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 채택한 '14차 5개년(2021~25년) 계획'과 '2035년 중장기 목표 강요'를 발표하고 차기 중장기 정책목표인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해 내수 위주의 '쌍순환' 경제성장과 혁신 발전을 강조함. 중국은 5개년 계획에 따른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2035년까지 GDP 200조 위안, 1인당 GDP 2만 달러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 중임.
- 5개년 계획은 글로벌 교역의 부진, 미국 등 각국의 대 중국 견제 심화, 기존 수출 중심 경제성장의 한계 봉착 등으로 인해 내수활성화라는 국내 대순환의 기초 위에 국제 대순환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내수와 수출의 쌍순환을 통한 경제발전 추구, 녹색경제(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달성방안 마련), 농촌의 현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정책성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노력

- 상하이 전면 봉쇄, 베이징시 준봉쇄 등 제로 코로나를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동반 위축되자, 2022년 5월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 중소기업, 대외무역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함.
- (경기부양) 재정·금융·산업공급망 안정, 소비 및 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민생 안정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연간 세금 환급금 2.64조 위안 규모의 세금환급 시행, 5대 취약업종의 사회보험료 유예 등을 포함한 33개의 정책을 발표함.
- (중소기업) 대금결제, 임대료, 비용절감, 자금지원, 대-중소기업 융합, 산업 체인 시너지 효과, 중소기업 정부 지원 총 7개 분야에 대해 기대출 원리금의 6개월 상환 유예, 임대인이 정부기관인 경우 3개월분의 임대료 감면 등을 포함한 27개 조치를 담은 '경영 애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함.
- (대외무역) 대외무역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생산 및 물류 안정, 재정 및 금융지원, 시장 확대, 산업공급망 안정 총 4개 분야에 대해 해운 서비스 확보 및 주요 항만의 수송 효율 제고 등을 포함한 13개 조치를 발표하고 관련 정부 부처 앞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요청함.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중국은 63개국 중 17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17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이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함. 분야별로는 경제 성과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이고, 정부 효율성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순위가 하락했으나,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순위가 상승함.
 - * 13위(2018년) → 14위(2019년) → 20위(2020년) → 16위(2021년)
-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의 총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중국의 경제 성과는 4위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정부 효율성 및 인프라는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하여 각각 29위, 21위를 기록하였으며, 기업 효율성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5위를 기록함.

전방위적 노력을 통한 빈곤 퇴치 성공을 선언하였으나 OECD 기준과는 차이 존재

-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의식주 걱정 없이 물질적으로 안락함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샤오강(小康) 사회' 정책 시행으로 약 610억 달러를 투입하여 농촌 극빈층이 2016년 대비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빈곤 퇴치를 위한 싸움에서 전면 승리하였다고 2021년 2월 선언함. 다만, OECD 기준* 으로는 여전히 빈곤층이 많은 편임.
 - * OECD 기준에 의하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하루 수입이 19위안(연 7000위안) 이하인 사람들이나, 중국은 하루 수입이 11위안 이하인 사람을 빈곤인구로 분류하는 등 빈곤 기준이 다름.
- 고립된 마을 길 정비, 도로 포장 등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병원 결연을 통해 빈곤층 건강 상태 주기적 점검, 빈곤층을 위한 거주지 건설, 보조금 제공 등 빈곤 퇴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정치안정

2022년 10월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3연임 여부 결정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공산당 중심의 통일된 집권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함.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27년 간 집권했던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15년 이상 집권하는 지도자가 됨.
- 시진핑 주석은 정권 연장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 물가 급등 등 민생 관련 리스크에 집중하여 민심 이탈 방지에 힘쓰고 있음. 다만,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한 무관용 조치로 기업과 시민들의 피로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22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경기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함. 이는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임.
- 한편,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집권의 최대 위험 요인인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엄중하게 처벌함. 다만,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됐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종신형 선고 등 유력 후보자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정치적 뜻이 다른 인물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처벌되자,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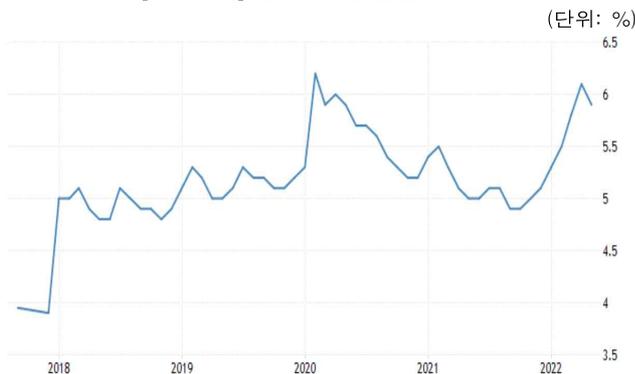
도시 봉쇄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청년층 실업률 증가 가속화

- 중국의 2022년 4월 실업률은 6.1%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6.2% 이후 최고치임. 2022년 5월 실업률은 5.9%로 전월 대비 0.2%p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임. 한편, 중국 대학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16~24세) 실업률은 2022년 5월 기준 18.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청년실업률을 집계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임.

* 중국 대학 졸업자 수(만 명): 114(2001년) → 413(2006년) → 631(2010년) → 749(2015년) → 874(2020년) → 909(2021년)

- 실업률 상승은 상업 중심지인 상하이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두 달간 봉쇄되는 등 도시 곳곳에서 전면 또는 부분적인 봉쇄 조치가 이루어진 결과로 추정됨. 상하이 시 당국은 대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산하 국유기업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상하이 출신 대졸자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채용 취업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취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림 10] 중국의 실업률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그림 11]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 추이



자료: Statista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

- 중국은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 항목 중 언론의 자유 부문에서 141개국 중 140위, 국경없는 기자회가 2022년 5월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2022'에서 180개국 중 175위를 기록할 정도로 자유로운 언론 보도가 제한되고 정부에 의한 강력한 언론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인터넷 뉴스 정보를 관리하는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으로, 이 규정은 제작·배포를 엄금하는 11가지 악성 콘텐츠*를 명시함. 정부는 뉴스 공급자가 코로나19 등의 재난에 대한 부당한 논평과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억제해야 하며, 사용자들의 유언비어 날조 행위에는 강력한 민·형사상 처벌을 가하겠다고 밝힘.

* 헌법 위배, 국가안보 훼손, 정부 전복, 국가통일 파괴, 국가 이익 훼손, 영웅 열사 정신 왜곡,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선동, 민족단결 파괴, 국가 종교정책 위반, 유언비어 유포와 경제 및 사회질서 교란, 음란·외설·도박·살해 등의 범죄 유포, 명예 훼손, 법률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을 포함한 정보 등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ESG 요소가 중국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 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급격한 도시화와 1인당 물 사용량 증가, 기후 변동성 확대에 의한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이 물 부족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물 확보와 공기 오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중국은 그간 꾸준한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과 공공재정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노동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됨. 이는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특기할 만한 위험요소가 없이 안정적인 편으로, 건전하고 관리 가능한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환경 및 사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추어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다소 긍정적(2등급)으로 평가됨.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

- 2019년 3월 말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며 촉발된 시위는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적으로 확대, 지속되다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영향으로 시위 규모와 빈도가 감소하였음.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의 시위·소요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여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입법을 추진하여 2020년 6월 말 이를 발효하였으며, 홍콩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이 과정에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조치의 시행으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갈등에 직면하였음.
-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정부 전복, 테러행위 등 4가지 행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경미한 범죄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외 지역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020년 7월 1일에 300명 이상의 홍콩 시민이 동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202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하였으며 5월 27일 홍콩 입법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음. 개편안은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 심사 위원회 설치,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친중 세력 확대, 입법회 선출직 축소 등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제관계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저조,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서방 국가들과 갈등 지속

- 2020년 1월 15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서에 서명하여, 2018년 3월 이후 22개월에 걸쳐 지속된 무역분쟁의 합의사항을 공식화함.
- 동 합의를 통해 양국의 무역갈등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정한 무역합의사항(미국산 물품 수입 이행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2022년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Quad)* 회의에서 호주를 포함한 4개국 정상들이 중국을 겨냥해 동·남중국해에서의 위압적, 도발적,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솔로몬제도에 이어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통가 등 남태평양 8개국과도 안보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갈등이 고조됨.

* 호주, 미국, 일본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회의체임.

** 솔로몬제도를 포함한 남태평양 8개국은 호주와는 약 2천여km, 미국 하와이와는 약 3천여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됨.

- 2022년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하자, 중국은 근거없는 비방이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모든 이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단호하게 맞서 갈등이 고조됨.

* 매년 6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당국 수장들이 모여 군사 의제 논의

- 2022년 8월 2일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여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자 중국은 이에 강경히 반발하여 대만산 감귤류 과일과 해산물 수입 금지 및 중국산 천연모래의 대만 수출 중단 등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섰으며, 대만 주위의 영공과 해상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하는 등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됨.

아세안 국가의 중요 파트너로 선정,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속

- 2022년 5월, 일본 외무성이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국가 18~59세 성인 총 2,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20 국가 중 아세안에 중요한 파트너 국가를 고르라는 질문에 중국이 1위로 선정*됨. 일본 외무성이 2008년부터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중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ASEAN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총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간 전반적인 상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함.

- 주요 파트너국 순위: 중국 48%, 일본 43% 미국 41%, 아세안 40%, 한국 28%

- 중국은 아세안 4개국(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파트너국으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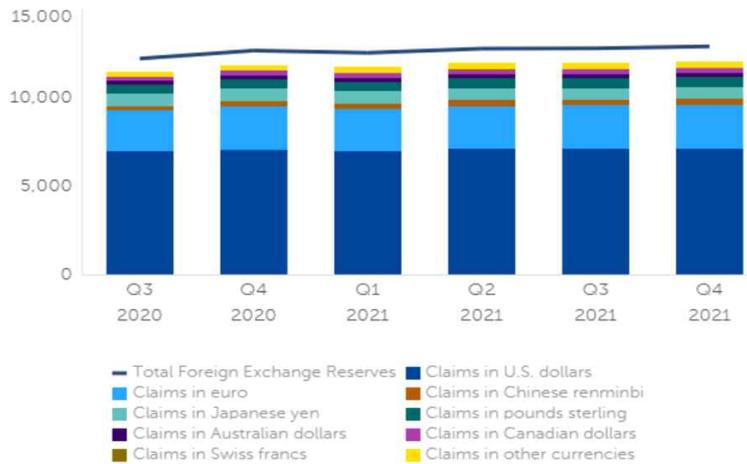
- 각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의 범위가 중첩되고 남중국해에 매장된 원유·가스의 발굴 등 경제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국제관계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 증가

- IMF 통계(2022.3.31.)에 따르면 2021년 말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약 12조 9,372억 달러로, 이 중 위안화 비중은 2.79%로 2016년 말 대비 1.7%p 늘었으며, 외환보유액 구성 통화에 위안화를 포함 시키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4개국의 위안화 보유 규모는 300억 달러로 5년 전 대비 약 10배 급증함.
- 2021년 브라질의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 비중은 4.99%로 2020년(1.21%) 대비 약 4배 증가하였음.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으로, 브라질은 중국에 주로 철광석과 콩을 수출하고 화학제품과 기계를 수입함.
- 이스라엘은 2022년부터 외환보유액 구성에 위안화를 추가하기로 함. IMF는 2022년 5월 14일부터 특별 인출권(SDR)*을 구성하는 5종 통화 중 달러와 위안화 비중은 상향하고, 유로, 엔, 파운드 비중은 내림.
- * SDR(Special Drawing Right)은 IMF 특별인출권으로, IMF 회원국의 통화에 대한 잠재적인 권리로 SDR의 보유자는 SDR을 다른 통화와 교환할 수 있음. IMF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배분받음.

[그림 12]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별 외환보유액
(단위: 십억 달러)



외채상환태도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중국은 단기외채잔액(2021년 말 1조 6,143억 달러, OECD)의 2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2021년 말 3조 2,501억 달러)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기준 9.6%의 낮은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편임.
- 한편, 2022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중국의 채무 잔액은 단기 132억 달러, 중장기 127억 달러 등 총 259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은 41백만 달러(0.16%)로 채무상환태도가 비교적 양호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22.07)	2등급(2020.06)
Moody's	A1 (2022.05)	A1 (2020.09)
Fitch	A+ (2022.06)	A+ (2021.06)

OECD와 국제신용평가 모두 기존 등급 유지

- 2017년 Moody's 등은 잠재성장률 하락, 부채 증가세 지속 등을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A1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이후 평가일 현재까지 OECD 및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은 변동 없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 경제성장 둔화 예상, 높은 공적채무 비율* 등을 감안하여 국제신인도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공적채무/GDP(OECD) : 46.1%('17) → 49.1%('18) → 57.2%('19) → 68.1%('20) → 73.3%('21) → 77.8%('22)

- 중국 경제는 2020년 초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침체되었으나,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과감한 방역조치 등에 힘입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하여 2021년 8.1%의 성장을 시현함. 다만, 안정세를 보이던 중국 내 코로나19가 2021년 말부터 재확산되면서 도시 봉쇄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심화를 계기로 내수를 중시하는 '쌍순환'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수립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코로나19의 재유행 방지에 중점을 둔 사회·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공산당 1당 독재체제로 정치 안정성은 높은 편이나 언론 통제, 인권 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과의 패권 다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등 다양한 국내외 문제가 상존함.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21년 기준 15.2%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9.6%로 낮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